

성범죄 어디서든 지켜본다...암행경찰 납시오~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신분 숨기고 범죄자 접근해 증거 수집 가능...디지털 성범죄 단속 광주·전남 위장수사관 4명 선정...범죄 예방 기대 속 남용 우려도

경찰의 암행 순찰과 암행 단속에 이어 위장 수사도 본격화된다. '경찰이 어디서든 지켜본다, 언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암행 단속에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 신분을 속이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 수집도 가능해진다.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자칫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과 남용 우려도 나온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할 위장수사관 4명을 선발, 전문교육을 거쳐 본격 운영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관으로 전국 사·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40명을 선발했다. 필요하면 일반 수사관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지정' 제도도 마련된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강간이나 성착취물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 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일명 '그루밍'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위장수사는 국내에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가 이뤄져왔지만 지난해부터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에서도 지난 한 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257건에 이른다. 경찰은 229건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45건의 디지털 성

범죄가 발생한 상태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86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 50건을 검거하고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 3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공포한 이후 6개월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경찰은 신분을 위장, 계약·거래 뿐 아니라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나 불법 영상물 유통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

범죄는 은폐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 방식으로는 수사하기가 힘들다"면서 "위장수사를 도입으로 온라인 대화방을 '사냥터' 삼아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니는 성격의 '암행순찰'의 경우 오히려 시행 이후 단속 건수가 급증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의 올해 암행순찰 교통단속 결과, 150건(3월)→161건(5월)→211건(7월)→ 332건(9월 22일까지) 등으로 증가세다. 전남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9800여건의 위반 차량 단속이 이뤄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신분 위장이 가능한 점에도, 효과적 수사 방법과 단속을 명분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그러나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

장수사가 이루어지고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신분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 등 통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범죄 의도를 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죄 의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 과도한 '합정' 수사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위장수사가 자칫 과도한 합정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조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 연휴 뒤 쌓이는 재활용품

23일 오전 광주 북구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수거한 재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징역 살게 해야하는데... 방청석 노모 눈에 밝혀” 법원, 6개 혐의 60대 벌금형

“실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밝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복학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 A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80대 노모가 새하얀 머리를 숙였다.

A(63)씨는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까지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밤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며칠 뒤 광주시 북구 다른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공짜로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새벽에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불안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장이 A씨에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A씨 모친은 순간 몸을 앞으로 당겨앉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장이 “A씨만 생각하면 실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윤 판사는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이어 “어머니를 잘 모실 거라는 믿음으로 벌금형을 택했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친은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60대 아들을 따라 법정을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 잇단 수사 '파문'

수사기밀 누설·알선수재 혐의 등...경찰 수사권 남용 비판도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김중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A(50)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경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 경위 뿐 아니라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B 경위는 휴대전화로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광주지검은 B 경위 외에도 같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C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B 경위를 지난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맞춰지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수사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걸핏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부르짖던 경찰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

호사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면서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A 경위를 공범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방해 우려를 내세워 첫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 보장 및 재판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담당변호사는 “추가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이와관련,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지원 여성 판사 자택서 숨진채 발견

현직 판사가 추석 연휴 기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로, 추석연휴 마지막 날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친척이 집을 찾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